전남광주 '웰다잉' 관련 조례·의료 인프라 '빈틈'

웰다잉문화운동 '지역 웰다잉 지표' 분석

옛 광주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없어
옛 전남은 호스피스 기관 22곳 중 2곳뿐
기초지자체, 광역 조례·예산 공백 보완
지역별 생애말기 돌봄 격차 해소 과제



치매 예방체조 함께 해요 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문흥동 문화근린공원에서 열린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 행사에 참가한 북구청직장어린이집 아이들과 지역 주민들이 강사의 치매 예방 체조를 함께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웰다잉(Well-dying)' 관련 제도와 생애말기 의료 인프라가 타 지역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역 차원의 관련 조례가 비어 있거나 호스피스 전문기관 등이 일부 지역에 집중돼 전남광주시 차원의 제도 정비와 지역 간 격차 해소가 과제로 떠올랐다.

이 같은 결과는 사단법인 웰다잉문화운동(공동대표 원혜영)이 4일 국내 최초로 개발한 '지역 웰다잉 지표'를 통해 전국 광역지자체 17곳과 기초지자체 229곳을 분석하면서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광주·전남 통합 이전의 자치단체별 현황을 기준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옛 광주시는 1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공영장례 지원 조례가 없었다. 다만 광주지역 5개 자치구는 모두 관련 조례를 제정해 광역단체의 제도 공백을 기초지자체가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옛 전남도 역시 1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웰다잉 문화 조성 조례가 없었다. 반면 22개 시·군 가운데 14곳(63.6%)은 자체 조례를 제정했다.

전남의 생애말기 의료 기반은 더욱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호스피스 전문기관은 22개 시·군 가운데 순천과 화순 등 2곳(9.1%)에만 설치돼 있었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곳도 8곳(36.4%)에 그쳤다.

특히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률이 높은 구례(13.3%)와 담양(12.5%), 곡성(12.0%), 보성(11.4%), 장성(11.3%) 등은 호스피스 전문기관과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모두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죽음을 미리 준비하려는 주민의 의식에 비해 실제 생애말기 의료를 지원할 기반은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다.

재택의료센터 역시 곡성·고흥·무안·함평·영광·장성·진도·신안 등 8개 군에는 설치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전남의 재택의료센터 설치율은 63.6%로, 충북과 함께 울산·제주 다음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광주는 재가 돌봄 기반에서 강점을 보였다.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등을 제공하는 재가급여 기관은 노인 1만명당 3.33개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았다. 광산구는 3.72개, 서구는 3.66개로 전국 최상위권에 포함됐다.

반면 요양원 등 시설급여 기관은 노인 1만명당 0.42개로 17개 시·도 가운데 다섯 번째로 적었다. 공설 장사시설도 5개 자치구 가운데 북구에만 설치돼 있었다.

성인 1만명당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광주 682.9명(6.8%), 전남 811.0명(8.1%)으로 나타났다. 광주 광산구의 등록률은 4.7%로 전국 하위권이었다.

웰다잉 관련 사업 예산은 광주시와 전남도 모두 별도로 편성하지 않았다. 다만 전남에서는 목포·여수와 화순·무안·장성 등 5개 시·군이 관련 예산을 편성해 서울과 함께 17개 시·도 가운데 기초지자체 예산 편성 사례가 가장 많았다.

전남의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정률은 50.0%(22곳 중 11곳)로 전국 평균인 73.8%를 크게 밑돌았다.

한수연 웰다잉문화운동 웰다잉지표개발팀장은 "웰다잉은 노인이나 임종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며 "전 생애에 걸쳐 죽음을 준비하는 문화가 지역사회에 뿌리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원혜영(전 국회의원) 웰다잉문화운동 공동대표도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삶을 마무리하려는 국민이 늘고 있지만, 군 지역의 호스피스 전문기관 설치는 매우 미미해 생애말기 지원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웰다잉문화운동은 아름답게 삶을 마무리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18년 설립됐다. 웰다잉은 죽음을 스스로 준비하는 것을 넘어 육체적 생명과 사회적 관계, 물질적·정신적 유산을 바람직하게 정리하는 삶의 과정까지 포괄한다. 단체는 관련 콘텐츠 개발과 법·제도 기반 마련을 위한 캠페인 등을 추진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전남광주시 "5개구 김장철 음식물쓰레기 특별관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광주지역 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오는 16일부터 12월18일까지 '김장철 음식물쓰레기 특별관리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전남광주시는 이 기간 동안 광주지역 5개 자치구의 공공음식물자원화시설 처리용량을 평상시보다 20% 증량해 하루 최대 540t까지 처리하고 반입 시간도 2시간 연장한다.

특히 '김장철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11-12월 운영해 배춧잎, 무청 등 부피가 큰 김장용 채소류에 대한 배출 불편을 해소하고 일반 생활폐기물과 혼합 수거·처리되는 문제를 개선한다.

김장용 전용봉투는 각 자치구 지정 판매소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판매가격은 1장당 1천400원으로 20ℓ 단일 규격으로 제작된다. /최명진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市 행정사무감사

"20조 재원 농어촌기본소득 지원 부적절"

문갑태 "예산 편성시 의견 수렴해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문갑태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5)은 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정책기획국 행정사무감사에서 20조 통합지원금 재원 배분의 적절성과 시의회 소통 부족을 비판했다.

문 의원은 "통합지원금을 농어촌 기본소득에 쓰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통합의 성과가 무엇인지,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돌아오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원들도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필요한 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데 지난 4개월 동안 그런 제안을 요청받은 적이 없다"며 "시민들은 통합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의견조차 듣지 않는다면 통합 이후 달라진 것이 무엇이겠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정 여건상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더라도 필요한 사업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며 시의회 의장단과의 사전 협의를 촉구했다.

이에 김기숙 정책기획국장은 "통합지원금 활용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의회 의견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변은진 기자

"전남광주시 'AI 활용 주 4일제' 현실성 의문"

박상길 "현장 여건 고려한 준비 필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박상길 의원(더불어민주당·남구2)은 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정책기획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민형배 시장이 밝힌 내년 주 4.5일제, 2028년 주 4일제 추진 구상에 대해 "AI가 모든 업무를 대신할 수는 없는데 주 4일제가 가능하겠느냐"며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일부 공직자들은 오후 10시가 넘도록 일하고 있다"며 "지역 간 갈등이나 조정이 필요한 사안도 많은데 AI가 출장 가고 갈등을 풀어주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이 말하면 시정의 방향이 되는 것 아니냐"며 "직원들과 이야기가 돼야 하는데 발표부터 하고, 시장은 말하고 공직자들은 모른다고 하면 안 된다"고 질타했다.

또 "공직자들이 2년 안에 주 4일 근무를 한다면 의회도 모든 일정이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사전 협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 4일제와 주 4.5일제를 적극 환영하지만 현장 업무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고 준비한 뒤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은진 기자

"광주비엔날레 파빌리온 운영 기준 부재"

박민영 "전남광주시 대응 일관성 부족"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박민영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문화도시예술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비엔날레 파빌리온 논란과 관련해 "국제행사를 운영하면서 국가관과 기관관을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불명확한 기준과 행정 처리 혼선이 파빌리온 명칭 논란을 키우고 중국 측 전시팀의 철수로까지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민형배 시장과 전남광주시가 파빌리온 논란에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았다며 대응 과정에서 일관성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술의 자율성과 외교적 민감성을 처음부터 함께 고려했어야 한다"며 "국가관·기관관의 명확한 구분 기준을 마련하고 전남광주시·재단 간 역할과 책임을 재정립하는 한편 위기관리 체계도 갖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윤창모 문화도시예술본부장은 "내부적으로 국가관과 기관관을 구분해 운영했지만 외형적으로는 구분하기 어려웠다"며 "별도의 구분 기준이나 운영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변은진 기자

